

“병원 가기 힘든데 매월 의사가 방문해 돌봐주니 살만하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K복지’ 브랜드 되다

〈1〉집으로 찾아 온 의료 돌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농로를 따라 승용차로 2분을 달려야 닿는 광주시 광산구 유림길 단층주택에 우리동네의원 의료진이 들어섰다.

이들은 광주시 통합 돌봄 중 의료돌봄을 담당하는 의료진들로 김익주(69)씨를 방문 진료하기 위해 자택을 찾았다. 시각장애로 직접 병원에 가기 힘든 김씨의 건강을 챙기기 위함이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낡은 선풍기만 돌아가는 후텁지근한 방에서 의료진이 혈압계를 꺼내 들고 복약 상태와 호흡을 확인했다.

“약 드셨죠?”라며 의료진이 몇마디를 건네고 안정할 시간을 주자, ‘170’까지 치솟았던 혈압이 안정권으로 내려갔다.

같은 시간 간호사는 복구청에서 온 과태료 압류 고지서 3통을 확인하고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이날 진료는 30분 가량, 생활문제 상담은 더 길었다.

김씨는 한쪽 눈 실명에 당뇨·고혈압을 앓고 있다. 폐에 물이 차 숨가쁨이 오면 자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다. 김씨는 “한번 나갔다가 오는 게 행사 중의 행사”라며 방문진료·방문간호가 삶의 리듬을 바꿨다고 했다.

현장 진료를 맡은 오규희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1차 진료는 질병만 보지 않는다. 정결·식사·스트레스·돌봄자 유무까지 살핀다”고 했다. 오 원장은 김씨 사례처럼 행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흔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구청을 아우른 ‘생활·의료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씨가 “과태료 납부고지서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고 토로하자 의료진은 바로 구청에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30분 남짓한 진료는 생활 문제 해결 상담으로 이어졌다.

광주시 통합 돌봄은 통합돌봄 콜이나 동직원의 의무방문으로 대상자가 발굴되면 케어매니저가 1대1 계획을 세우고, 생활돌봄 13종과 의료돌봄을 통합 연계한다.

의료돌봄은 ‘의사 1회 대면 후 간호사 지속 방문’이 원칙이다. 의사의 방문은 1차의료 시범사업·장기요양 재택의료 등 국가제도를 활용하고, 그다음부터는 통합돌봄 내 방문간호가 주기적으로 이어진다.

김씨처럼 이동이 어려운 가구는 병원동행·대청

진료하고 약 챙겨주기를 넘어

목욕·운동·방역·식사지원까지

“삶이 ‘영점’에서 ‘플러스’로 가야

진짜 건강해지는 따뜻한 복지”

소·식사지원·AI안부확인·ICT 안전체크까지 한 묶음으로 들어간다.

광주형 13종 신설서비스에는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 방문맞춤운동, AI안부확인, ICT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 대청소, 방역·방충, 케어안심주택이 포함된다. 생활의 틈을 메운 뒤, 재활·구강·간호를 얹어 ‘낙상·육창·영양실조’의 악순환을 끊는 방식이다.

김씨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호흡기 중증장애가 있는 노부부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살며 병원 이동조차 막막했던 가정에는 방문맞춤운동으로 집안 활동성을 회복시키고, 10년 넘게 치과를 못 간 상황에는 방문 구강교육팀을 불렀다.

병원 이동은 동행지원으로, 의료 처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해 해결했다. “살던 곳에서 회복”을 목표로 한 표준 연계다.

복지 현장도 바뀌고 있다. 구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의료돌봄 매니저가 혈압·혈당·운동·영양을 분담하고, 권역·지역 방문의료지원센터가 의과·치과·한 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의 대표 협력 거점으로 전남대(권역)와 광주기독병원(지역)이 지정됐고, 물리·작업치료사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동에서 대면배달로 반찬을 전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는 바로 구청에 통보한다”는 시 담당자의 설명처럼, 행정·의료·생활 지원을 한데 묶은 통합형서비스다.

한 간호사는 “정기 방문과 ‘콜’ 대응을 섞어 열흘에 한 번꼴로 대상자를 돌본다. 병원에 못 오거나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 사람을 기다린다”고 웃어보였다. 하루 5-8가구를 돌보면서 생활이 플러스로 바뀌는 걸 직접 보는 게 보람이라고 했다.

오 원장은 “약을 지어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이 ‘영점’에서 ‘플러스’로 가야 진짜 건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진료를 마치고 “70평생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처음이요. 늙고 아프면 따스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오는 의료가 알려줬소”라면서 환관 밖으로 나선 의료진을 배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진희 인턴기자njinhee324@naver.com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중 의료돌봄 지원단인 우리동네 의원 의료진들이 지난 1일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김익주씨를 찾아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교육부, 전남 국립의대 2030년 개교 전망

전남도는 2027년 개교 목표로 계속 추진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2030년도로 예측했다. 통상 의대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경우를 가정해 2030년 개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전남도는 의대 신설 절차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내년 안에 충족시켜 당초 목표했던 2027년도 개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절차’를 설명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2030년 3월로 전망했다.

의대 신설 주요 절차는 미래 의사 인력을 전망하는 보건복지부의 수급 추계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신설 의대 지역과 정원 규모, 의사 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교육부가 내년도 상반기 신설 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며, 대학들이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에 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 추계위에서 전남 몫의 인원을 확보하고 신설 대학에 의대 정원을 배정받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절차를 거친 후 남아있는 절차의 특성상 2030년도에는 되어야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의대의 경우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절차 후에 ‘한국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늦어도 개교 1년 3개월 전 예비인증 평가를 신청하고 의평원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교원, 교육시설, 부속병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의대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제 교원을 채용하고 시설·기자재, 교육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예비인증 평가를 신청한 뒤 인증 기준에 충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2027년 3월까지 남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물리적인 조건 충족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목표대와 순천대가 지금부터 의평원 기준 달성에 나서면 2027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국정과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되면 의평원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평원 인증과 대입시행계획 변경 등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남도와 순천대, 목포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속도를 내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무안군 /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